

특별사료자금 1조3천억 지원

정부는 최근 축산물 값하락과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000억원을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1700억원)도 추경으로 3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특별사료구매자금은 연리 1.5%(축종별 2~3년 상환)의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된다. 특히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한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의 지원조건(연리 3%, 2년 상환)도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구매자금 금리와 동일하게 연리 1.5%, 축종별 2~3년 상환조건으로 완화된다. 농식품부는 4월까지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해 5월부터 자금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자금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돈농가의 경우 모돈감축 이행계획서 제출농가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축산물수급안정을 위해 4월중 민·관이 참여하는 축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육점 등에서도 수제햄 등 식육 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6월 초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000억원을 저리로 지원할 경우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농가의 해당기간 금리부담이 1755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요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조사료

경남 고성 영천낙우회(회장 김용원)에서 젓소 1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일이 발생했다. 같은 TMR사료를 급여한 젓소에게 장염이 발생하고, 연이어 폐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농가들은 수입조사료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살펴본 결과 조사료의 마른 걸면을 드러낸 안쪽은 모두 곰팡이가 피어 변질돼 있었다.

농가들은 수입업체에 즉각 항의하고 반품조치를 했지만 결국 폐사한 젓소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

졌다. 관계자는 “솔직히 이런 일이 한두번도 아니고, 농가 입장에서 피해보상까지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런 문제있는 사료가 유통되면 농가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를 취급하는 업체들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원 영천낙우회장은 불량 조사료의 유통은 결국 불합리한 조사료 수급체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소가 먹는 사료는 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풀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좋은 풀을 많이 먹어야 가축이 살이 찐고, 우유도 많이 나올 텐데 좋은 풀을 구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며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니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가져다 줘도 쉽게 불만을 말하지 못한다. 국내 조사료 자급률이 90%를 넘는데 현장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구할 곳이 없다. 이번 문제를 단순한 유통과정이나 한두 업체의 문제가 아닌 불합리한 조사료 유통체계의 문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축분 배출시설 점검

802곳 가운데 107곳 적발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월 4~29일 전국 802개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을 점검한 결과 107곳(13.3%)의 위반시설을 적발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중간에 배출하는 행위 ▲신고하지 않은 농경지에 액비를 뿌리는 행위 ▲퇴비화 시설 유출방지턱 및 비가림 시설 미설치 등 부적정 운영 등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겨울철에 처리하지 못하고 보관했던 가축분뇨와 퇴비·액비를 봄철 강우기 때 무단 투기하거나 몰래 배출해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행위도 15건에 달했다.

환경부는 위반시설에 대해 각각 개선 명령, 과태료 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점검 결과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축산분야 정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추가제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중국 유제품 수출 호조세로 유업계 '활짝'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산 유제품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최근 불황이었던 유업계에 '단비'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유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으로 수출하는 조제분유와 유음료, 생우유 등의 수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조제분유로 지난해 수출액은 2010년 대비 5배 증가한 4000만 달러로 조사됐으며 생우유는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남양유업은 지난해 12월 중국 항주한양무역공사와 150만 칸 분량의 수출 MOU(업무협약)를 체결, 전년 대비 100% 이상 수출량이 상승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현지에 영업사원을 파견해 GDP(국내총생산) 3000달러를 넘어서는 34개 도시를 타깃으로 올해 말까지 판로개척을 완료할 예정이어서 향후 수출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매일유업도 지난해 140억원을 기록했던 중국 분유수출 실적에 100% 이상 늘어나면서 올해는 300억원 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수출 기대감에 힘입어 매일유업 주가도 사상 최고가인 4만3500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대비 28% 이상 오르면서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의 수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가공유 중에는 빙그레의 '바나나우유'가 수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가 늘어나기 시작한 바나나우유는 지난해 1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호상 발효유나 아이스크림의 수출량도 전년에 비해 소폭 늘어나며 중국 수출 유제품의 제품군이 다양해 질 것이라는 예상도 이어지고 있다.

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내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산 유제품, 조제분유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올해 세계 최대 우유 수출국인 뉴질랜드가 30년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유제품 수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한국 유제품의 수출 호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EU FTA 철폐 "수입 치즈 판매량 늘어날 것"

4월 28일 관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치즈 소비량은 2008년 1.47kg에서 지난해 1.98kg으로 증가했다. 치즈의 수입량 역시 2008년 4만7000t에서 지난해 약 7만7000t으로 증가한 것을 보였다. 이 중 프랑스 치즈 수입량은 2008년 897t에서 지난해 2841t으로 증가했다. 앞으로 한·EU FTA가 체결 돼 유럽산 유제품 수입에 더욱 힘이 실어질 전망이다.

프랑스산 치즈의 관세율은 2011년 현재 36%이며, 한·EU FTA로 인한 관세 철폐는 15년 내에 이루어지면 치즈의 무관세쿼터 제공량은 4560t으로 협의됐다. 체다 치즈의 경우 10년 이내 관세 철폐하기로 협의했다.

15년간 제한된 물량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철폐가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러나 15년 후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수입치즈의 가격이 현재보다 30% 가량 낮아지므로 수입수요가 증가해 현재보다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산 원재료를 가공하여 치즈를 생산하는 업체는 '임실치즈' 한 제품뿐이며 대부분의 국내 치즈생산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하여 치즈를 생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EU FTA로 인한 원재료 가격 인하로 국내산 치즈 가격 역시 함께 하락할 수 있다.

해묵은 과제 타결...낙농업계 한숨 돌려

낙농가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낙농쟁점들이 타결됐다. 원유가격산정체계, 낙농진흥회 쿼터 인수도시 귀속률 조정, 연간총량제 한도 폐지 등이 그것이다. 우선 유지방 가격 차등제가 도입된지 40년 만에 새로운 원유가격산정체계가 도입된다. 원유가격산정체계에 유단백기준이 신설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지난달 26일 유단백 기준을 포함하는 원유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합의했다.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낙농가들은 유단백 함량에 따라 원유가격을 차등 적용받게 된다. 다만 유지방 기준은 하향 조정됐다. 또 기본 수취가격 ±0의 원칙에 따라 수

취가격은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낙농진흥회는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해 소위원회(위원장 신관우·총북낙협장)를 통해 수차례 협상을 지속해 왔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유지방의 기준을 낮추고, 유단백의 함량을 기준에 넣자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논의해 왔다.

유업체와 생산자는 ±0의 원칙을 지킨다는 목표로 협상을 지속했지만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내년 1월부터 유단백이 원유가격의 기준으로 반영되게 됐다. 이와 함께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의 쿼터 귀속률과 연간총량제도 개선됐다.

낙농진흥회는 4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낙농가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낙농진흥회 농가 인수도시 쿼터 귀속률 조정과 연간총량제 문제점도 해결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인수도시 쿼터 귀속률을 기존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고, 농가들의 요구사항인 연간총량제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폭언 파문’ 남양유업 하락, 매일유업 주가는 ‘휘파람’

물품강매와 영업사원 폭언 파문으로 검찰조사까지 받게 된 남양유업 주가가 2% 넘게 하락했다. 경쟁업체 매일유업은 반사이익 기대 덕에 쓸쓸하게 오르며 업계 라이벌의 약재를 즐겼다.

지난 5월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남양유업은 2.02% 떨어진 111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5.79% 하락한 107만4000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5월 이후 내수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온 남양유업으로선 보기 드문 하락세를 경험했다.

남양유업 주가의 부진은 영업사원의 폭언논란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주말 30대 남양유업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함께 물량 밀어내기 강요를 한 음성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녹취록은 트위터 등을 통해 온라인 상에 빠르게 번졌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남양유업 불매운동까지 거론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대리점주에 대한 자사 물품 강매혐의 조사를 위해 지난 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남양유업 본사와 일부 지점 등 총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이 울상을 짓는 동안 유제품 업계 경쟁사인 매일유업은 코스닥시장에서 2.14% 오른 5만2600원을 기록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파문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박애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운동 규모와 효과를 예단하긴 힘들지만 단기적으로 매일유업 등 관련 유제품 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 ‘Milk School’ 농촌 관광자원 모범사례로

경기도내 낙농체험목장 ‘Milk School’이 큰 인기를 끌면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11개소 농장에서 ‘Milk School’ 낙농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소득이 전체 19억여원에 이르고, 농가당 방문객은 1만 2천명, 평균소득이 1억 7천여만원에 달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Milk School’은 자라나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우유짜기, 송아지 우유먹이기, 건초주기, 치즈 만들기, 우유를 이용한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유가공품의 제조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낙농체험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낙농체험이 가능한 목장 11개소를 선정해 각 2억원씩 6년간 22억원을 지원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용인=농도원목장, 청계목장, 화성=진주목장, 신하늘목장, 김포=꿈목장, 이천 =와우목장, 파주 =모산목장, 고구려목장, 포천=아트팜, 여주=은아목장, 연천=애심목장 등 총 11개의 Milk school 목장이 운영 중이다. 초기 체험객은 전체 1만 2천명 수준이었으나, 매년 체험객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는 12만 4천명이 찾아 FMD 등 질병 여파로 피해가 컸던 낙농업계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백한승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Milk School’ 낙농체험은 기존의 목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자연 친화적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과 아름답게 변화된 목장 현장은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도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다. ☺